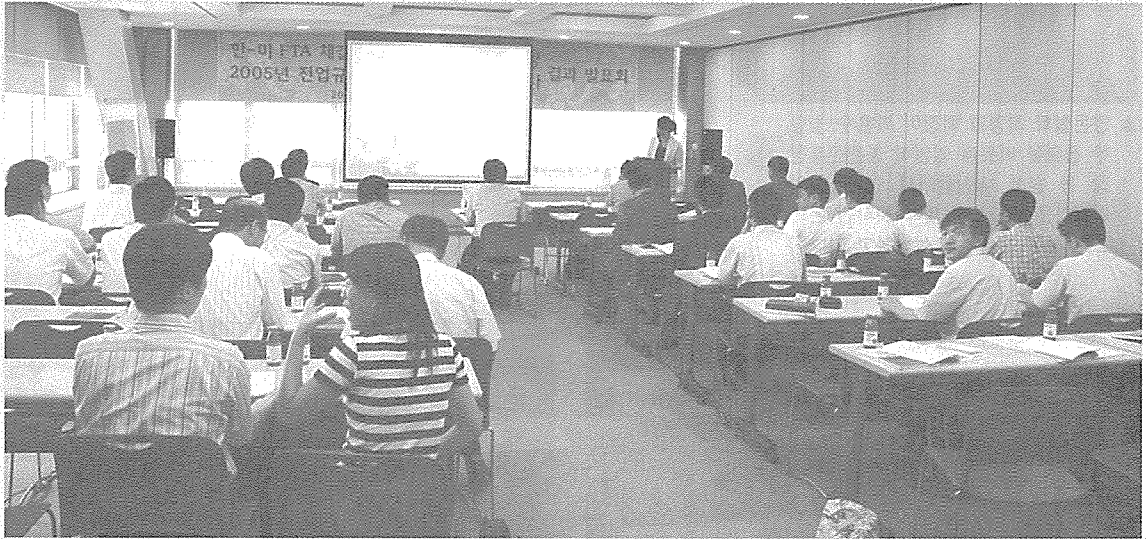


한·미FTA 양돈산업 피해액 최대 1조869억원

한·미 두당 생산비 차이로 국산 돼지고기 경쟁력 저하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모두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양돈산업은 최대 1조 869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나타났다.

(사)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지난 9월 1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양돈업계 관계자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미 FTA의 영향과 한국 양돈산업의 대응 방안” 연구조사 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미 FTA 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건국대 김민경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소국임이 걱정되어, “한미 FTA 체결시 한국 양돈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세철폐로 인한 돼지고기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양돈산업의 생산액감소를 추정한 결과, 최대 4,496억원의 양돈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며 연간평균 3,311억원의 피해가 초래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와의 대체정도를 고려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피해액을 추정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돼지고기와 쇠고기 모두 무관세로 수입되는 경우 최소 8,243억원에서 최대 1조869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가능하며, 연평균 9,556억원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두당 생산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두당 생산비가 194.39달러이며 미국은 133.55달러로 미국의 생산비는 한국의 70% 수준

한·미 FTA 양돈산업 피해액 최대 1조869억원

에 머물고 있어, 미국의 낮은 생산비를 확인할 수 있다. 생산비는 돼지고기 가격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로 인해 무관세로 미국산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낮은 수입가격으로 인해 국내 양돈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FTA 협상에 따른 협상전략으로는 ▲민감품목 지정 ▲장기에 걸친 관세 감축 ▲시장접근 제약 강화 ▲위생·검역장치 강화로 나타났으며, 국내 대응전략으로는 ▲농지법 개선 ▲환경친화 및 안전관리 강화 제품 육성 ▲분뇨처리 전문화 ▲폐사율 하락을 위한 보조금 정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부보조 ▲생산구조 개편 조정을 촉진하는 정책(친환경 직불제 형태의 보조, 환경보조금 형태의 정부지원, 분뇨처리시설 보조, 생산·가공·유통·분뇨처리 시설의 연대이용 체계 구축, 적정규모 폐업 보상금) ▲유통 개선 ▲고품질 브랜드 육성 ▲수출시장 확보 ▲위험최소화 방안 모색 등으로 나타났다.

1 FTA 협상전략

1. 민감품목지정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이며, 미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시장개방시 수입감소액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미국은 냉장기술이 뛰어나 국내산과 차이없는 질 좋은 돼지고기 수출이 용이하며,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체결로 우리나라 수입업자들이 수입선을 다른 수입국에서 미국으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해

야한다.

2. 장기에 걸친 관세 감축

이는 FTA체결로 인한 가격 및 균형물량 변화의 영향을 여러 해로 분산시킬 수 있어, 생산감소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돼지고기 시장은 도하개발(DDA) 협상과 그 속도를 맞춰,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관세를 감축하여 그 생산감소액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3. 시장접근(Market Access)제약 강화

관세할당량(TRQ: Tariff Rate Quotas)을 도입하는 방안을 세운다. 고가 대량 수입부위(삼겹살, 목살, 갈비 등)와 소량 저가부위(뼈, 지방, 내장 등)로 세분화하고 이를 다시 냉동육과 냉장육으로 구분하여 차등고관세와 차등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도록 한 후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관세를 감축하는 방안을 세운다.

4. 위생·검역장치 강화

위생검역장치를 강화하고 돼지질병을 철저히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병발생시 수입금지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COOL)표시제를 활용하여, 질병발생시 추적가능토록 한다.

2 국내 정책 대응

■ 생산비 절감방안

1. 농지법의 개선

농지법 개선으로 축사의 농지내 진입 허용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에는 축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대(地賃)가 높은 기타 지역에서 축산업을 해야만 하고, 민가와 인접하고 있어 민원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

이를 해소하고 축산인이 축산업에 전념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농업진흥지역에 축사의 진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비 절감과 생산 효율성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 축산업의 소득세 감면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2004년 소득세 분부터 2009년분까지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반면 축산인은 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었다. 축산업도 소득세 감면을 통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의 소득 보전의 한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폐사율을 하락을 위한 보조금 정책

가격경쟁을 위한 생산비를 절감을 위해 폐사율을 낮춰야 한다. 산비절감을 위해 폐사율을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생환경과 안전관리를 위한 체제와 설비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폐사율을 낮출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위생직불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도축세 폐지 필요

가격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주요 축산물 수출국가들에게는 없는 도축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축세는 일반세로서 그 세수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특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는 시·군의 경

우, 전체 지방세 중 도축세는 0.2%를 차지하여 그 세수감소에 따른 시군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생산비절감을 위한 정부보조

미국과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폐사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하며 또한 사료비와 가축비의 절감을 위해 정부보조가 필요하다.

▣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

6. 환경친화 및 안전관리 강화 제품육성

소비자에게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환경친화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품질을 육성하여 품질경쟁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에 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질병관리보조의 강화

가축질병의 예방으로 인해 안전한 돼지고기라는 국내외적 인식은 우리농가의 피해를 줄일 뿐 아니라 수출시장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현재 가축방역사업을 강화하여 현재 실행하고 있는 긴급방역재료공급, 예방약품 공급, 그리고 예방접종 시술 외에 살처분 보상금의 확대가 필요하며,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8. 분뇨처리 전문화

생산에만 집중해야 할 농가가 분뇨와 같은 환경문제까지 떠맡고 있어, 양돈농가의 양돈생산성을

한·미 FTA 양돈산업 피해액 최대 1조869억원

저하시킬 뿐 아니라 환경도 오염되기 쉽다. 따라서 양질의 축분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뇨처리 공동화작업을 위한 정부보조와 분뇨전문가가 분뇨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장치를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

9. 생산구조 개편조정을 촉진하는 정책 필요

멕시코는 NAFTA체결 후 소규모 상업적 생산형 농가의 생산성은 현저히 줄어들고 고도기술 생산형과 전통적 생산형만 주를 이루는 양돈산업의 양극화현상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체결후 수입 돼지고기와 가격경쟁, 그리고 다른 대체재와 육류시장 안에서 경쟁으로 소규모 양돈농가의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쟁력있는 적절한 규모를 중심으로 양돈산업을 재편하고 육성시켜야 한다.

경쟁력있는 1,000두 이상의 경영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 ① 정부의 친환경직불제 형태의 보조가 필요하다.
- ② 환경보조금형태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 ③ 분뇨처리시설 보조를 현행 50%에서 상승시켜 농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 ④ 생산·가공·유통·분뇨처리시설의 연대이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부의 환경관련 보조가 필요하다.
- ⑤ 소규모 농가의 폐업을 위한 적정규모의 폐업보상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포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년치 순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
- ⑥ 생산자 조직을 주축으로 하는 사육·사료·생산·가공·판매를 연계하는 계열화를 전개하여

야한다.

⑦ 인력난 극복을 위한 인력양성과 노동의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10. 유통의 개선

국내 축산물의 우수성이 부각된다 하여도 축산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역추적할 수 있고, 또 수입 축산물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제(COOL)을 정착시켜야 한다.

11. 고품질 브랜드 육성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의 고급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고품질 브랜드를 육성하며, 생산된 고품질 제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는 유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12. 수출시장 확보

삼겹살처럼 국내소비가 크고 국내가격이 비싼 품목은 수입하고 전·후지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선호 부위는 일본과 미국등지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생과 안전관리가 철저히 구축되어야 하며, 수출국들에 대한 정보와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13. 위험 최소화 방안 모색

수직 및 수평계열화로 생산과 유통 그리고 가격위험을 피할 수 있어 수익증대를 모색할 수 있다. 돈지육 선물시장(2006년 실시예정)을 이용하여 양돈농가가 가격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